

Vol. 31

주간

농업농촌동향

2018. 7. 30.

■ 정책동향

- 폭염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 등

■ 아젠다발굴

- 이슈 브리프 | OECD-FAO 농업전망 2018-2027
- 유럽 농업농촌 동향 | 유럽연합의 직접지불금제도 개편안
- 일본 농업농촌 동향 | 국토교통성 드론 배송 실용화 실험
- 언론 동향 |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주요 동향

■ 통계·조사

- 2018년 보리, 마늘,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 등

정책동향 폭염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8.7.24.)

□ 개요

- [농식품부, 「폭염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 추진, 7.24」 최근 전국에 계속*된 폭염으로 일부 농작물 생육 장애,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, 기상청에 따르면 고온현상이 7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므로 향후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을 우려
 - ※ 7월 11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 발효 지속
- (주요 내용) 농식품부는 폭염피해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,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비상 TF도 가동

□ 농산물 수급·가격 동향

- 폭염으로 무·배추 등 일부 채소 가격이 상승하였으나, 현재까지 그 외 과일·과채,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, 다만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고온이 지속될 경우, 농축산물의 공급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내재
- [노지채소] 배추·무는 7월 상순까지 평년 수준의 가격이었으나, 중순부터 폭염의 영향으로 상승세
 - ※ 배추: (6월.하순) 1,561원/포기 → (7.상순) 1,828 → (7.중순) 2,652 (평년 대비 27.9%↑)
 - ※ 무: (6월.하순) 1,143원/개 → (7.상순) 1,128 → (7.중순) 1,450 (평년 대비 43.7%↑)
- (배추) 7월 상순 고랭지 배추 주산지인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고, 이후 폭염으로 중·하순 주 출하지역*에서 무름병 등으로 작황이 악화
 - ※ 태백 상·하사미, 삼척 하장, 정선 임계, 평창 진부(해발 500~800m)
- (무) 노지 봄작형이 주로 출하되고 있으나, 재배면적 감소(평년 대비 9.6%↓)에 폭염으로 작황까지 악화되어 출하량이 감소
- [과채] 폭염에도 애호박, 파프리카 등은 출하량이 증가하여 가격은 평년 대비 낮은 수준이며, 토마토나 수박도 폭염보다는 주로 남부 지방 조기 출하 종료, 계절적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 상승세
 - ※ 애호박: (6월.하순) 7,875원/20개 → (7.상순) 12,078 → (7.중순) 8,689 (평년 대비 37.0%↓)
 - ※ 파프리카: (6월.하순) 13,755원/5kg → (7.상순) 15,516 → (7.중순) 11,820 (평년 대비 4.6%↓)
 - ※ 토마토: (6월.하순) 11,761원/10kg → (7.상순) 9,086 → (7.중순) 18,286 (평년 대비 41.2%↑)
 - ※ 수박: (6월.하순) 11,674원/8kg → (7.상순) 12,524 → (7.중순) 15,287 (평년 대비 5.6%↑)

㉔ 정책동향

- [과일] 대표적인 여름철 과일인 **복숭아, 포도** 등은 봉지 씌우기를 하고 있어 **폭염의 영향이 제한적**, △복숭아·채배면적 증가 등으로 가격이 평년보다 낮고, △포도·폐업 증가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평년 대비 높은 수준, △사과·배·공급량이 많아 **평년보다 낮은 시세**
 - ※ 복숭아(백도): (6월 하순) 13,559원/4.5kg → (7.상순) 15,437 → (7.중순) 18,628 (평년 대비 10.9%↓)
 - ※ 포도(캠벨): (6월 하순) 24,000원/5kg → (7.상순) 28,311 → (7.중순) 25,697 (평년 대비 8.0%↑)
 - ※ 사과(부사): (6월 하순) 23,772원/10kg → (7.상순) 25,726 → (7.중순) 21,842 (평년 대비 24.9%↓)
- [축산물] 돼지, 육계와 산란계 사육마릿수가 전년 동기 대비 **모두 증가**하였고, 현재까지 폭염에 따른 **파해 규모**는 전체 사육마릿수 대비 **돼지 0.07%, 닭 0.62%, 오리 0.44%** 수준
 - (돼지고기) 최근 무더위에 따른 **소비감소**로 가격이 **하향세**를 보이고 있고, (닭고기·계란) 가격은 최근 **다소 상승세**를 띠고 있으나 **여전히 평년보다 낮은 수준**
 - ※ 돼지고기: (6월 하순) 5,347원/kg → (7.상순) 5,544 → (7.중순) 5,335 (평년 대비 10.1%↑)
 - ※ 닭고기(산지): (6월 하순) 1,182원/kg → (7.상순) 1,313 → (7.중순) 1,500 (평년 대비 7.0%↓)
 - ※ 계란(산지): (6월 하순) 589원/10개 → (7.상순) 676 → (7.중순) 819 (평년 대비 37.3%↓)

㉕ 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

- 농식품부는 폭염 장기화로 농기피해가 커지고 일부 농축산물의 수급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**농업재해대책상황실(6.5~10.15.)**을 중심으로 **폭염 피해 최소화 대책**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,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**비상 TF도 가동**
- 중앙단위 **현장기술지원단***(8개반, 84명)을 **추가 편성****하여 **채소·가축** 등의 고온·다습에 따른 **병충해 발생상황** 등 진단과 처방, **생육관리 기술지도** 등 농가 지원을 강화
 - ※ △채소 분야·3개반, 8명(강원도 고랭지 무·배추 재배지역 중심) △축산 분야·5개반
 - ※※ 고랭지 배추·무(7.17.~수확 종료 시까지), 가축(6.25.~8.3.)
 - 전국 농업기술센터, 농협, 생산자단체, 일선 농가들을 대상으로 고온·폭염 대비 **가축·농작물 관리 요령**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**정보도 지속적으로 제공**
- 특히, 고온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**고랭지 배추**는 ‘이상기상 대응 매뉴얼’에 따라 **‘경제정보’**를 **발령(7.18.)**하고, **「이상기상 대응 배추 수급안정 TF*」**를 **운영** 중이며, 7.20일에 첫 회의를 개최하였고, 앞으로 기관별 추진실적을 주 2회 점검할 계획
 - ※ 농식품부, 주산지 지자체(강원도 등), 농협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(aT), 한국농촌경제연구원(KREI) 등 참여
 - 작황 및 수급 상황 변화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측하기 위하여 현지에 상주하는 **산지 기동반**을 **별도로 운영**하여 생육 상황을 **상시 모니터링**하고 수급불안 예측 시 **관측 속보 발행** 등을 통해 정보를 신속히 전파할 계획

㉔ 정책동향

- 지역 농협 및 농협지역본부의 산지직업반, 공동방제단 등 운영을 대폭 확대하여 긴급 급수, 조기 출하 작업 지원, 무름병 약제 공급, 공동 방제 등 농가의 생육관리 지원을 강화
- 폭염 장기화 전망에 따라 관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밭 중심으로 관정 개발, 간이 급수시설 설치, 살수차 운영 등의 급수 대책비용도 긴급 지원할 계획(7월 중)
 - 지자체별 토양 수분함량, 무강우 일수, 밭 면적 등을 고려하여 가뭄예신(30억 원 규모)을 지자체별로 포괄 배정하여 지자체가 시급한 부분에 우선 집행하고, 이후 기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

㉕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

- 폭염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물 피해 및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이 예상되는 품목은 선제적으로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
 - 배추, 무 등 밥상물가와 관련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수급 조절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한편,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판매도 실시할 계획
- [노지채소] △배추·1일 100~150톤의 비축물량(총 6천 톤 보유)을 당분간 집중 방출하고, 향후 수급상황에 대한 정확한 관측을 바탕으로 방출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계획, △무·봄무 계약재배 물량의 도매시장 출하를 확대(1일 20톤 → 40톤), 고랭지 무 조기 출하(8월 중순 → 상순, 채소가격안정제)를 유도,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할인판매*를 실시
 - ※ 7.21.~, 1,500원/개, 시중 가격 대비 20~30%↓, 농협매장
- [과채] 평년 대비 가격이 높은 토마토는 계약재배 물량의 조기 출하를 유도*하여 공급물량 부족을 완화할 계획
 - ※ 과채류 수급안정사업 적립금 활용, 조기출하에 참여하는 농가 대상, 수확 작업비 등 출하 제비용 일부 지원
- [과일] 가격 상승 품목 중심으로 농협 계통 매장, 공영 홈쇼핑 등을 활용한 알뜰과일 할인 행사를 실시하고 자조금 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출하를 조절할 계획
- [축산물] △돼지고기·뺏다리살 등 비선호 부위 소비 촉진 캠페인(~8월)과 한돈몰 바캉스 기획전 할인판매(20%↓, 7.16.~8.17.), △계란·농협지역본부 소비촉진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
- 농산물유통정보시스템(KAMS) 등을 통해 품목별 출하 및 가격동향(전일·전주 대비 가격 변화 추이 등), 할인판매 매장, 직거래 장터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품목의 소비를 유도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계획

폭염 피해 범정부 대응 상황 점검

자료 :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(2018.7.23.)

□ 개요

- [정부, 「폭염 관련 관계부처 회의*」 개최, 7.23.] 정부는 연일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, 각 부처별 폭염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, 인명 피해 및 국민 불편 최소화에 만전
 - ※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농식품부, 산업통상자원부, 보건복지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소방청

□ 주요 내용

- 기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을 통해 수립된 폭염 대비 정부 대책의 현장 추진상황에 대해 집중 점검했으며, 8월 중순까지 고온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상전망에 따른 추가적인 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
 - (행정안전부) 폭염기간 중 지자체 일일점검회의 개최 등을 통해 예방·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, 관계 공무원이 폭염 현장 점검 시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(체크리스트)를 마련하여 폭염 대응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
 - (산업통상자원부) 예비력 단계별 수급안정화 대책에 따라 안정적 전력공급에 만전, 폭염 등으로 인한 주택 정전 사고 시 복구 및 안전점검을 위한 24시간 긴급 출동 서비스*도 차질 없이 운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
 - ※ 콜센터(1588-7500) 주택전기 긴급출동 고충처리(전기안전119) 제도 운영, 전국 60개 사업소에서 24시간 긴급출동(2017년 65,831개소 복구지원)
 - (보건복지부) 독거노인·노숙인·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대책 추진
 - (농식품부·해양수산부) 가축·양식어류 폐사 방지를 위한 현장 컨설팅·지도 강화 등 소관분야 폭염 피해 발생 방지 노력 지속
 - (국토교통부) 기존 철도분야 폭염 대책에 추가하여 아스팔트 융기 등 폭염으로 인한 도로 피해에 대해서도 관제센터를 통한 지속 모니터링 및 순찰 등을 강화
 - 또한, 온열질환자 119응급 출동 건수가 작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하는 등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행정안전부·문화체육관광부 등은 국민행동요령과 관련된 종합 홍보전략을 수립

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 결과

자료 : 기획재정부(2018.7.23.)

□ 개요

- [기획재정부·행정안전부, '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역순회 워크숍 개최*', 6.21~7.19.] 전국 8개 권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역·현장중심으로 확산하고자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 8개 지역에서 총 1,960여명 인원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 속에 마무리
 - ※ 강원(6.21.), 제주(6.28.), 서울·경기·인천(7.2.), 전북(7.4.), 충북·충남·대전·세종(7.6.), 대구·경북(7.13.), 광주·전남(7.17.), 부산·울산·경남(7.19.)

□ 주요 내용

-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육, 취약계층 고용, 친환경, 농촌 활성화, 문화 등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적경제 우수사례를 공유
 - (강원권역 '춘천별빛산골교육 사회적협동조합') 학부모와 함께 지역아동돌봄을 위한 공부방 운영, 마을주민 가정을 홈스테이로 활용하는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재생에 기여
 - (제주권역 '(주)섬이다') 지역순환경제모델 구축을 목표로 '닐모리동동', '우유부단' 등 로컬브랜드를 개발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3억 원 이상의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
 - (수도권역 '대지를 위한 바느질') 친환경·소규모 결혼식 확산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으로 친환경소매 웨딩드레스 제작, 지역식당·미용실을 활용한 결혼식 기획 등 마을웨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 - (전북권역 '꽃피는영농조합법인') '누구나 책, 누구나 도서관' 을 모토로 15만 여권의 책을 소장한 '책마을해리' 를 조성하고, 지역 교육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 문화공동체 조성에 기여
 - (충청권역 '품앗이마을') 로컬푸드 유통을 통해 농가에는 안정적 수익보장, 소비자에게는 친환경먹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사업수익을 청년,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활용
 - (경북권역 '(주)엘리블하우스') 소비자 맞춤 디자인 수제 롤케이크를 판매하는 사회적기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및 취약계층 대상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

㉔ 정책동향

- (전남권역 ‘주다우환경’) 청소노동자 권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**친환경 청소 전문 사회적 기업**으로 **취약계층 일자리 창출**뿐만 아니라 지역 내 **저소득층 가정** 등에 **무료 방역 서비스**를 제공하는 등 **사회서비스 제공**
- (경남권역 ‘하남양떡메마을기업’) 마을주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한 ‘양떡메’ (양피죽, 가래떡, 메주)를 판매하는 **마을기업**으로 **마을주민대상 나눔활동, 지역인재양성**을 위한 **기금 기탁** 등 **사회환원활동** 수행

행정안전부 「지방행정혁신 추진단」 출범

자료 : 행정안전부(2018.7.24.)

□ 개요

- [행정안전부, 「지방행정혁신 추진단*」 출범, 7.24.] 정책 현장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의 성과 창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「지방행정혁신 추진단」이 7월 24일 출범
 - ※ 지방행정정책관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

□ 주요 내용

- [목표] 지난 3월 발표된 「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」의 **실질적인 성과 창출**을 목표로 지방행정혁신의 확산을 중점적으로 추진
- [기본방향] 현재 자치분권 확대가 중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고 혁신은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중앙부처는 이를 지원하는 ‘**분권형 지방행정혁신**’을 **기본 방향**으로 하여 사업을 운영할 계획
 -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의 접점에서 **주민의 수요**를 **신속**하게 **파악**할 수 있고, 전국 **243개의 지방자치단체**에서 다양하고 **혁신적인 시도**가 **가능**, 따라서 주민이 체감하는 **창의적인 문제해결 사례**가 **창출**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
 - 이를 위해, 추진단은 지방행정혁신 전반에 현장과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**우수사례 공유, 지역별 토론회** 등 지방행정혁신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**지방자치단체와 보다 긴밀하게 협력**해 나가기로

㉔ 정책동향

▣ 17개 시·도 지방행정혁신 슬로건 ▣



수석보좌관 회의, 하반기 경제정책 자영업 문제 강조

자료 : 청와대(2018.7.23.)

- [대통령 주제, 수석보좌관 회의 개최, 7.23.] 경제 구조개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1)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문제에 적극 대처, 2) 과감한 규제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, 3)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의 소통 등 3가지 해법을 제시
 - 한편, 위와 같은 세 가지 사안을 밝히며 특별히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‘자영업 문제’를 강조하면서 청와대에 자영업 담당 비서관실을 신설하고, 상가 임대료와 임대기간 등 임대차 보호문제, 각종 수수료 경감, 골목상권 보호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

'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, 산림흡수원 최초 반영

자료 : 산림청(2018.7.24.)

□ 개요

- ['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로드맵' 에 '산림흡수원' 최초 반영, 7.24] 산림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하는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반영*한 결과이며, 2030년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예상량은 2천 210만 톤***인데 이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의 7%에 해당하고, 자동차 약 920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을 흡수하는 효과

※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는 모든 부문의 인위적 배출량 및 흡수량을 향후 NDC(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)에 포함하기로 결정하고,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적극적인 산림관리를 권장함.

※ INDC(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: 온실가스 감축목표)를 제출한 190개 국가 중 149개가 산림을 포함하며, 이중 EU·미국 등 53개 국가들이 산림탄소를 흡수원으로 보고함.

※※ 경제림단지 조성 등 선순환 산림경영 (2,117만 톤), 생활권도시숲 확대, 유희토지 (한계농지)의 산림전환 등(6만 톤), 국산목재 이력관리 및 제재목 확대 등(91만 톤)

□ 주요 내용

- 이번에 산림흡수원이 온실가스 감축수단에 포함됨으로써 배출권거래제*의 외부사업** 등록을 통한 산림탄소 거래기반을 강화

※ 배출권거래제: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,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

※※ 외부사업: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실적을 인증 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음.

- 현재 외부사업에 등록되어 있는 신규조림/재조림, 식생복구*, 목제품이용의 방법론 이외에 수종갱신, 산림경영 등의 방법론을 등록 추진할 계획, 이럴 경우 산주(임업인)들이 배출권거래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

※ 2018.4월 기준 산림분야 외부사업 등록 내역: △신규조림/재조림 1건, 30년간 감축효과 3,750톤, △식생복구 1건, 30년간 감축효과 1,950톤

㉔ 정책동향

- ‘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’ 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**온실가스감축을 생활화**하고 산림흡수원의 소중함을 느끼기 위한 **캠페인, 체험행사** 등을 전개할 계획
 - ※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: 지자체의 장이나 사업자가 사회에 공헌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산림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
 - ※ 2017년 말 기준 산림상쇄제도 등록 내역: △총사업등록 건수 157건, △총사업기간 동안의 흡수량 1,938,098톤
- [향후 계획] 경제림단지조성, 탄소흡수량을 고려한 경영계획 수립과 임도망 구축, 조림수종의 탄소흡수력 증진, 다층혼효림 조성 및 기능별 숲가꾸기 등을 통한 **탄소 선순환 산림경영**을 추진

▮ 감축로드맵 수정안 주요 내용(단위: 백만 톤, %) ▮

부문	배출전망 (BAU)	기존 로드맵		수정안		
		감축 후 배출량 (감축량)	BAU 대비 감축률	감축 후 배출량 (감축량)	BAU 대비 감축률	
배출원 감축	산업	481.0	424.6	11.7%	382.4	20.5%
	건물	197.2	161.4	18.1%	132.7	32.7%
	수송	105.2	79.3	24.6%	74.4	29.3%
	폐기물	15.5	11.9	23.0%	11.0	28.9%
	공공(기타)	21.0	17.4	17.3%	15.7	25.3%
	농축산	20.7	19.7	4.8%	19.0	7.9%
	탈루 등	10.3	10.3	0.0%	7.2	30.5%
감축 수단 활용	전환	(333.2)1	- 64.5		(확정 감축량) -23.7 (추가감축잠재량) -34.12	
	E신산업/CCUS	-	- 28.2	-	- 10.3	-
	산림흡수원		-		- 38.3	4.5%
	국외감축 등	-	- 95.9	11.3%		
기존 국내감축		631.9	25.7%	574.3	32.5%	
합계	850.8	536.0	37.0%	536.0	37.0%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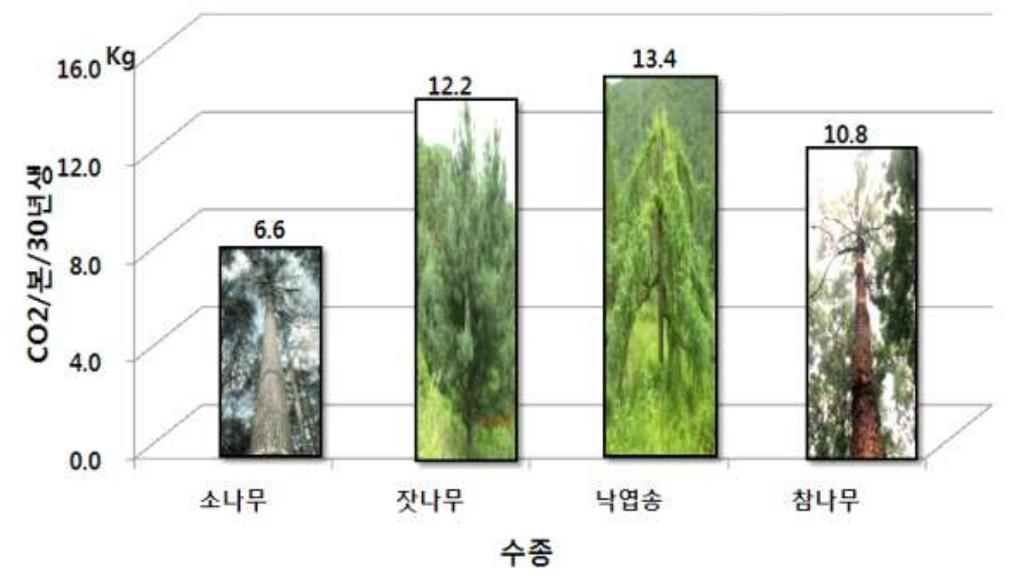
비고: 1. 전환부문 배출량(333.2백만 톤)은 부문별 전기/열사용에 할당, 전체 합계에서 제외
 2. 전환부문 감축량 23.7백만 톤 확정, 추가감축 잠재량은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

㉔ 정책동향

산림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개념도



30년생 나무 1그루 당 연간 CO2 흡수량



‘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’ 심화과정 운영

자료 : 농림축산식품부(2018.7.23.)

- [농식품공무원교육원 「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*」 심화과정 운영, 7.23~25.]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수료생에게 현장에서 필요한 **리더십 역량 강화**와 **소통의 기회**를 제공하기 위해 「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」 심화과정을 운영
 - ※ ‘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’ 과정: 농식품부 ‘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’에 따라 2002년부터 여성농업인의 지역 리더 육성을 목표로 매년 운영하는 교육원의 대표 교육과정으로 본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농업관련 단체 간부 활동을 비롯해 각종 대회 수상으로 언론매체에 소개되는 등 지도자로서 활발하게 활동 중임. 총 수료인원(2002~2017년) 369명
- (주요 내용) △**농촌지역의 양성평등 실현방안, 사회적 마을기업 만들기**, 지역민과의 갈등관리 등 **현장리더**로서 필요한 **역량을 키우고**, △전자상거래 관련법규의 이해, 농업회사법인 기초 이해, 농업경영인 회계 실무 등 **현장실무 능력 제고**를 목표로 설계

〈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과정 개요〉	
◆ (개설 배경)	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지위 향상과 전문농업 경영 역량 강화 계획 지원을 위해 2002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개설
※ 운영근거:	「여성농업인 육성법」 제5조(기본계획의 수립), 제1~4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 기본계획 (2001~2020년)
◆ (교육 목적)	여성농업인리더의 교수기법 습득, 기획력 및 리더십 개발 등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
◆ (추진 성과)	2002년~2017년까지 총 369명 교육 수료 후 지역 리더 및 강사로 활동, 수료생을 대상으로 격년제(짝수연도)로 ‘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심화 과정’ 을 운영
※ 수료생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	현장 강사요원으로 활동
◆ (교육 대상)	여성농업인을 지자체에서 교육 적격 여부를 검증 후 교육원에 추천
◆ (운영 방법)	△기준·지역별 인배, 영농경력, 지원동기 등을 감안하여 교육원 자체 선발 위원회를 거쳐 교육생 최종 확정, △인원·30명(누계 120명, 30명×4회) / 동일교육생을 대상으로 연 4회 실시, △교육기간·연 12일(회당 3일×4회, 76시간 내외), △교육내용·(리더역량 개발) 리더십 개발, 기획력 개발, 실무능력 배양, 정책방향 등 / (강의역량 개발) 교수법 개발, 강의력 증진, 정보화 능력 등, △환류·매회 교육생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과목 및 교재 내용, 강사, 현장학습 등에 대한 피드백을 도출하여 교육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

RCEP 제23차 공식 협상 개최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2018.7.23.)

- [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(RCEP*) 제23차 공식 협상 개최**, 7.23~27., 태국 방콕] 수석대표 회의를 중심으로 **상품·서비스투자** 분야에서의 **시장개방 협상**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, **원산지·통관·지재권 등 일부 규범** 분야에서 조기 타결을 적극 추진

※ RCEP(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): 아세안(ASEAN) 10개국 및 한국, 중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메가 FTA

※※ 수석대표 회의, 상품, 서비스, 투자, 지재권, 원산지 등 총 14개 작업반 회의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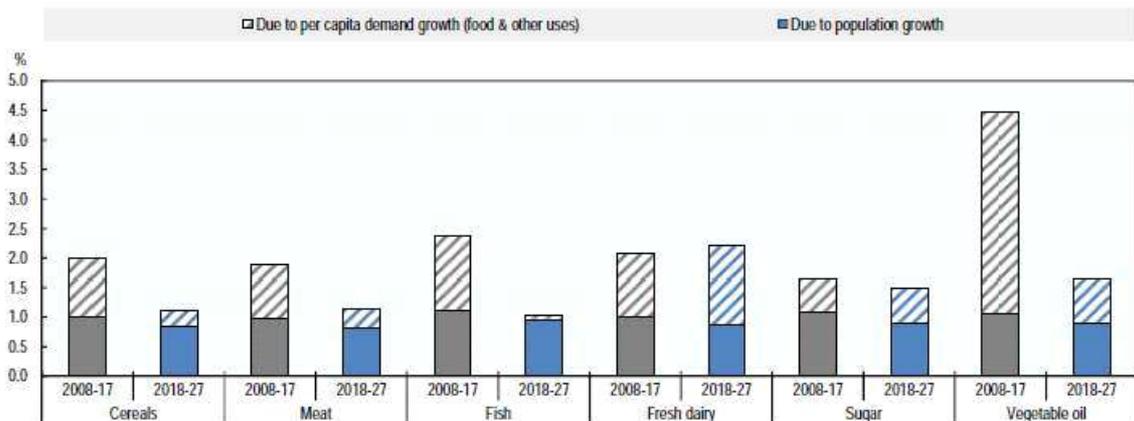
〈RCEP 타결 시 기대효과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◆ (상품) 15개국 모두에 적용되는 양허 방식이 논의 중인 바, 이 경우 한-아세안/인도 등 체결한지 오래되고 상대적으로 개방수준이 낮은 기존 FTA 대비 큰 폭의 추가자유화 가능 ◆ (서비스) 한-아세안, 한-인도 등 기 체결 FTA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 대비 추가개방 효과 발생 예상 ◆ (투자) 한-아세안/한-중 FTA의 경우 투자유보목록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, RCEP에서는 투자유보안 논의 중으로 기 체결 FTA 개선 효과 기대 ◆ (원산지) 기 체결 FTA상의 복잡·다양한 원산지 기준을 단순화, 통일된 기준을 적용*함으로써 수출입 기업들의 FTA 활용도** 제고 <p>※ FTA 수출활용률(2017)은 한-아세안 47.8%, 한-인도 67.5%로 낮으며 복잡한 원산지 규정이 원인으로 파악</p> <p>※※ (예시) A품목의 경우 한-아세안/베/호 “RVC40 or CTH”, 한-인 “CTSH+RVC35”, 한-중 “CTH” 이던 것을 RCEP에서 “RVC40 or CTH” 로 단순화</p>

※ 2018년 7월 3일 발간된 “OECD-FAO Agricultural Outlook 2018-2027” (출처: 주OECD대한민국대표부, 2018.7.20.) 주요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작성하였습니다.

<1. 소비>

- **농식품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는 향후 10년간(2018-2027) 약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**
 - 곡물·육류 등에 대한 1인당 소비량에는 큰 변화가 **없고**(flat), 인구 증가가 식품 수요 증가를 견인하지만 **인구 증가율이 감소**
 - 축산물 생산 집약화에 따라 중국 등의 사료 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나 성장세는 **둔화** 될 전망
 - 식물연료(biofuels)에 대한 수요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**제한적으로(modest) 증가**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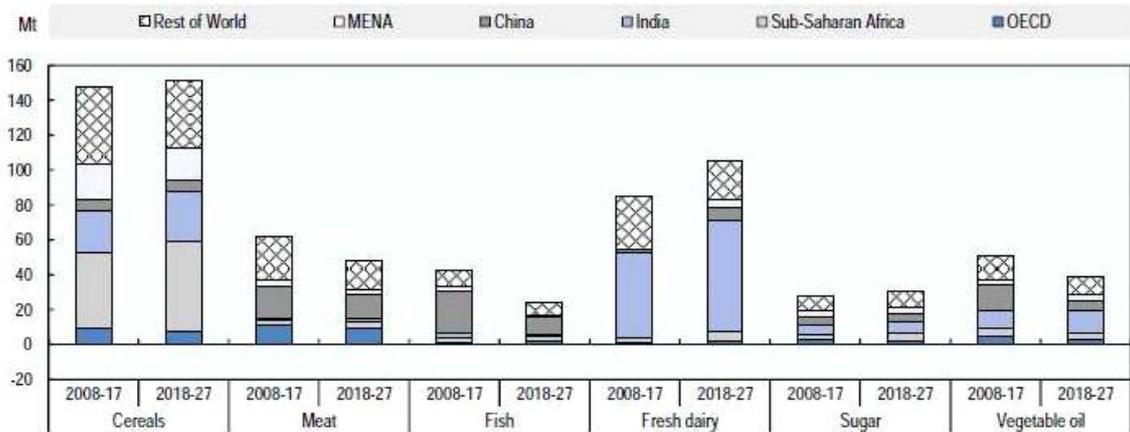
Figure 1.2. Annual growth in demand for key commodity groups, 2008-17 and 2018-27



- **개도국의 인구 및 소득 증가가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를 주도**
 - (곡물류) 인도·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, (육류·수산물) 중국, (낙농품) 인도 위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, 이들 지역은 높은 인구 성장 및 1인당 소득 증가가 예상
 - (식습관(dietary preferences)도 수요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) 소득 상승이 중국의 육류·수산물 수요 증가를 이끌었으나, 인도는 낙농품 소비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

㉔ 아젠다 발굴

Figure 1.3. Regional contributions to food demand growth, 2008-17 and 2018-27



- **낙농품(신선) 및 식물성 오일 수요는 연간 2% 수준 증가하는 반면, 곡물 및 육류·수산물의 1인당 소비량은 10년간 3% 미만 증가 전망**
 - (낙농품) **개도국은 신선 제품(우유 등)에 대한 소비가 많고, 선진국은 치즈·버터 등 가공 제품 소비가 많은** 특징을 보임.
 - (곡물류 섭취) 대부분 쌀과 밀로 이루어지며, 대부분 지역에서 이미 충분히 섭취하고 있어 **소비량 증가가 크지 않음.**
 - (1인당 육류 소비) **향후 10년간 가금류 5.5%, 쇠고기 3.5% 증가하고, 돼지고기는 현재 수준 유지 전망**
- **사료 작물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나 성장률은 감소하고, 식물연료에 대한 수요는 현재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**
 - **사료용 작물**에 대한 수요는 **연간 1.9% 성장**하여 식품용 작물에 대한 수요 성장률(1.1%)보다 높을 전망, 지역적으로 **중국, 브라질, 인도, 중동·아프리카에서 증가**
 - **식물 연료**에 대한 수요 증가는 에탄올 **향후 연간 0.7%(이전 10년 3.9%), 바이오 디젤 연간 0.4%(이전 10년 9.5%)로 성장세 둔화**, 중국, 브라질, 아르헨티나, 인도네시아 등 **개도국 중심으로 수요 증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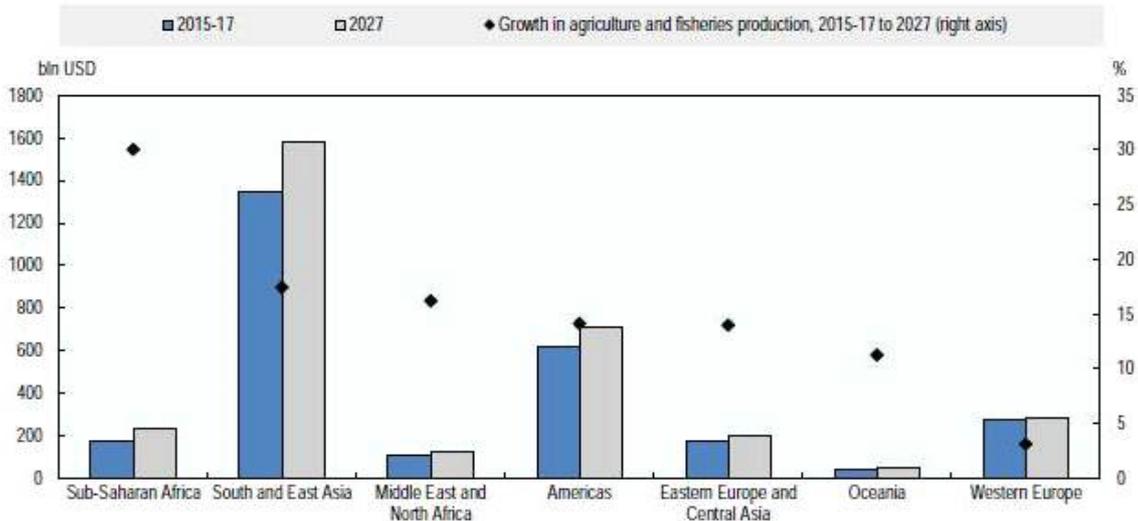
〈2. 생산〉

- **향후 10년간 농식품 생산은 이전 10년 기간 보다 둔화되어 연간 1.5%씩 증가, 총 16% 증가할 전망**
 - 생산 증가는 대부분 **생산성 증가**에 따른 것이며, 전체적인 관점에서 **농지 면적 증가는 거의 없음.**

㉔ 아젠다 발굴

-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, 동·남 아시아 등 **개도국 중심**으로 생산이 **증가**하고, 서유럽 등 **선진국**의 **증가세**는 상대적으로 **적을 전망**

Figure 1.17. Regional trends in production



- **농식품 생산은 지역적으로 다른 경향**을 보이며 발전될 전망
 - (아시아 지역) 10년간 17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, 특히 **중국의 정책 변화**는 **국제시장**에 영향을 미칠 것
 - (아메리카 지역) **농작물 14%, 쇠고기·돼지고기 16%** 증가하고, 칠레 등의 양식업 발전에 따라 수산물 생산이 9% 증가할 전망
 - (동유럽·중앙아시아 지역) 향후 10년간 14% 증가, **주요 밀 생산지역**으로 점유율을 2027년까지 25%로 높여갈 전망
 - (오세아니아 지역의 뉴질랜드) **환경 규제 강화**로 연간 우유 생산 증가율이 지난 10년간 3.3%에 비해 하락한 1.5%로 예상
 - (서유럽 지역) 향후 10년간 **농식품 생산 증가율**은 3%로 낮지만, **생산성이 높으며, 환경 관리를 강화**하고 있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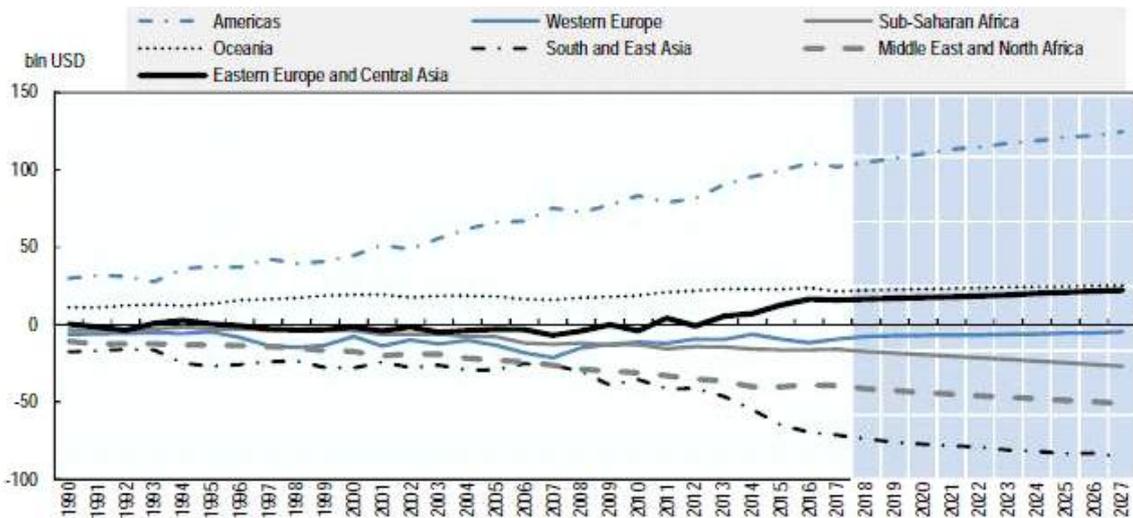
〈3. 무역〉

- 농식품 무역은 **기후, 지형, 농지** 등에 따라 **비교우위**가 결정되며, **인구밀도, 인구 증가율** 등이 무역 수지에 영향을 줌.
 - (농식품 순수출국은 아메리카, 오세아니아, 동유럽 국가들로 전망) **옥수수·콩·육류** 등을 중심으로 **아메리카의 순수출**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, **러시아와 우크라이나**가 **주요 순수출국**으로 등장

㉔ 아젠다 발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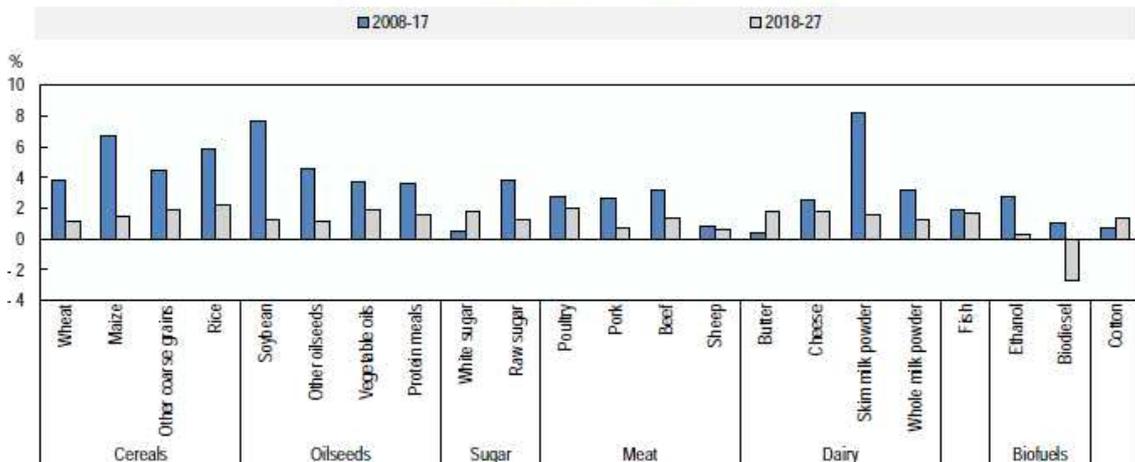
- (농식품 순수입국은 아시아, 아프리카, 서유럽 국가들로 전망) 일본은 전통적인 순수입국이나 무역 적자 폭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, 중국의 순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
- 수산물의 경우 미국·EU 등이 순수입국이며, 중국·노르웨이·베트남 등이 순수출국으로 전망됨.

Figure 1.18. Agricultural trade balances by region, in constant value, 1990-2027



- [농식품 수요 감소에 따라 농식품 무역 성장세도 상당히 둔화될 전망 가장 높은 무역 성장률이 예상되는 품목은 쌀이지만 연간 성장률이 2.2%에 머물고, 식물연료 등은 성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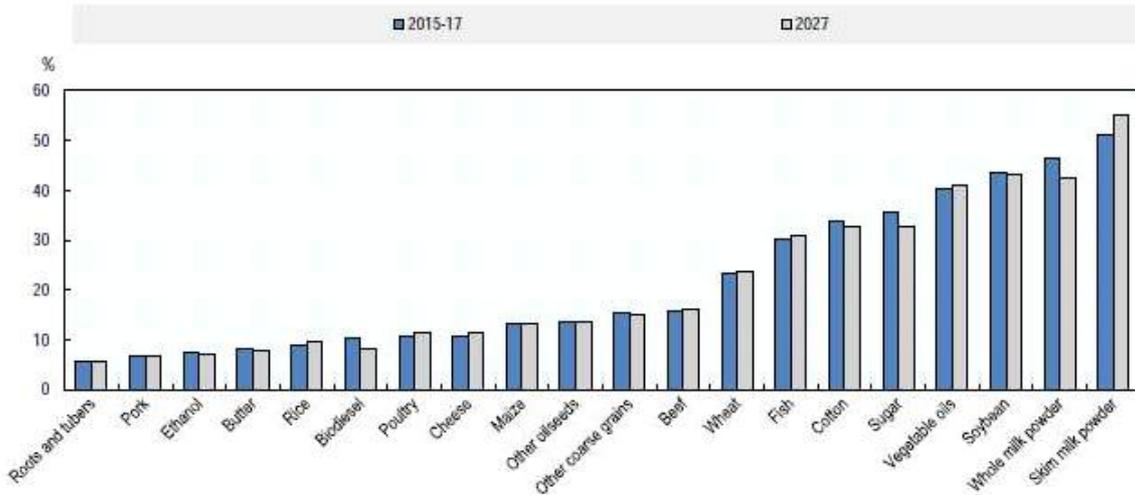
Figure 1.20. Growth in trade volumes, by commodity



- [무역의 중요성은 품목별로 달라 돼지고기·버터·쌀 등은 생산량 중 교역되는 비율이 10% 이하이나, 면화·설탕·콩·분유 등은 생산량의 3분의 1 이상이 교역됨.

㉔ 아젠다 발굴

Figure 1.21. Share of production trade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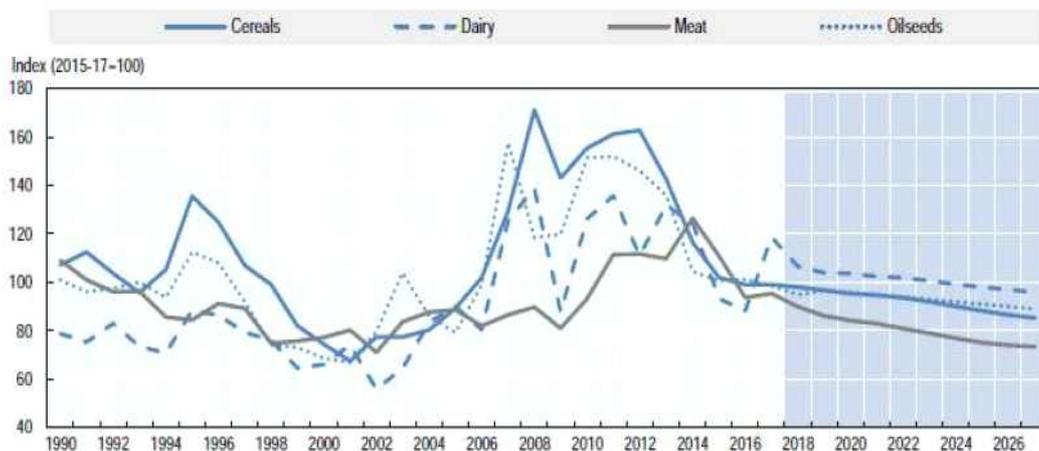


- 품목별 수출은 주요 국가에 집중되고, 수입은 여러 국가에 넓게 분산되는 경향을 보일 전망
 - 대부분 품목에서 상위 5개국 이 수출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점유*하며, 이는 주요 수출국에서 생산 충격이 국제시장에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, 수입 상위 5개국 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부분 60% 이하***
 - ※ 콩·돼지고기 90% 이상, 수산물은 50% 이하
 - ※※ 쌀·밀 30% 미만. 단, 중국의 수요가 많은 콩·감자·고구마류는 70% 이상

<4. 가격>

- [대부분 품목그룹의 실질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] 2006-2008년 최고 가격을 형성한 곡물류와 콩류 및 2013-2014년 최고 가격을 보인 육류·낙농품의 실질 가격 모두 하향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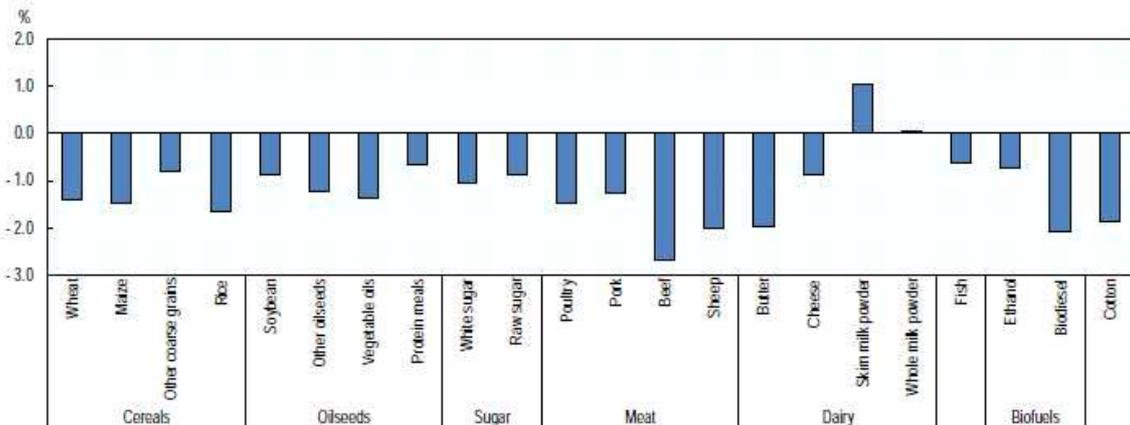
Figure 1.24. Medium-term evolution of commodity prices, in real terms



㉔ 아젠다 발굴

- [품목별] **탈지분유· 전지분유를 제외하고 연간 실질가격 변화율이 마이너스(-)**를 기록할 전망, 가격 하락세는 주로 생산성 향상에 따라 대부분 품목의 공급량이 증가할 것임을 의미

Figure 1.25. Average annual real price change for agricultural commodities, 2018-27



<5. 주요 품목별 전망>

- [곡물류] 주로 수확량(yield) 증가에 힘입어 **2027년까지 생산 13% 증가**
 - **옥수수·밀** 시장에서 **러시아가 부상**하고, **쌀**의 경우 **태국·인도·베트남**이 국제 시장의 주요 공급지이며 **캄보디아·미얀마**의 수출 점유율이 상승
- [콩류] **지난 10년간 연간 생산량 증가율을 하회, 생산 연 1.5% 증가**
 - **대두박·식물성 오일**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둔화되고, **콩·대두박 수출은 아메리카**, **식물성 오일 수출은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**가 중심
- [설탕] **지난 10년에 비해 생산 둔화** 예상
 - **브라질**이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될 것이며, **선진국은 건강에 대한 우려로 1인당 소비 정체가 예상**되나, **아시아·아프리카** 국가는 인구성장 및 도시화로 **설탕 소비가 지지**될 것
- [육류] **2027년 생산량**이 기준기간(2015-2017년) 보다 **15% 증가**될 전망
 - 개도국의 가금육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**산출량 증가의 76%가 개도국**에서 이루어질 것임. 그러나 **개도국의 소비자**들은 쇠고기·양고기 등 보다 **고급육**에 대한 소비를 **늘려갈 것**으로 예상
 - **주요 수입국**은 **중국·한국·사우디아라비아** 등 아시아 국가로 **필리핀·베트남**에서 **많은 증가**가 있을 전망

㉔ 아젠다 발굴

-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·미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45%로 증가 예상
- [낙농품] 인도와 파키스탄 중심으로 생산량 22% 증가 전망
 - 2027년 인도·파키스탄의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32%를 차지하고 증가된 생산량은 대부분 자국에서 신선 제품으로 소비될 것임.
- [수산물] 양식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증가하나, 증가 속도는 이전 10년보다 낮아질 전망
 - 아프리카를 제외한 전 대륙에서 1인당 수산물 소비가 증가하며, 특히 아시아 국가의 소비가 많을 것임. 또한 수산물 수출은 아시아 국가가 중심이며, OECD 국가들이 주요 수입국
- [식물연료] 에탄올 생산이 2017년 1,200억 리터에서 2027년 1,300억 리터로 증가; 바이오 디젤 생산은 2017년 360억 리터에서 2027년 390억 리터로 증가 예상
- [면화] 생산 증가가 소비 증가 보다 낮고 인도가 최대 생산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, 수출은 미국이 2027년 수출시장의 36%를 차지하며 주요 수출국이 될 것으로 예상

유럽 농업·농촌 동향 유럽연합의 직접지불금제도 개편안

※ IEG Policy에서 발표한 “CAP Reform comparison 2015–20 vs 2021–27: Direct Payments (2018.6.26.)” 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여 작성하였습니다.

□ 유럽연합의 직접지불금제도 개편안

- 2018년 6월 1일 발표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공동농업정책 개혁안(2021-2027 CAP)과 현재 공동농업정책(2015-2020 CAP)을 비교해 보면 급진적인 변화는 없었으나 각 회원국의 공동농업정책 상 전략적 계획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설계 및 집행방식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.
 -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에서 직접지불금제도를 현재의 공동농업정책과 비교·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음.
- 정책 전달체계(Delivery mechanism)
 - (2015-2020 CAP) 제1축 보조금 규정에 집중하면서 회원국들이 규정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였음. 제2축의 국가/지역 계획은 중앙의 ‘메뉴’ 에서 선택하고 위원회가 승인하는 방식이었음.

㉔ **아젠다 발굴**

- (2021-2027 CAP) 각 회원국들은 제1축과 제2축 요인들을 절충하면서 **공동농업정책의 전략적 계획(Strategic scheme)**을 정하고 **9개의 구체적 목표**를 다루었음. 회원국들은 **자격 요건**을 정하고 **위원회는 전략적 계획을 승인**할 수 있음. 또한 회원국들은 **공동의 지표**를 이용하여 **진행상황**을 위원회에 **보고**함.
- **단일직불제(Single Area Payment Scheme)**
 - (2015-2020 CAP) 새로운 13개 회원국 중 **11개국**에 적용된 **단순화된 생산비연계 직접 지불금**임. 모든 농가들은 국가 기준으로 계산된 **동일한 면적 단위**의 **자격조건**을 지니며 **단순화된 상호의무준수 규칙**들이 적용됨.
 - (2021-2027 CAP) **단일직불제**에 관한 **조항 없음**.
- **직불금 상한선(Capping of aid payments)**
 - (2015-2020 CAP) **15만 유로**를 넘는 **기본직불금**에 대해 **최소 5%의 세금**을 부과함. 농장 근로자들에 대한 **노임 비용**은 **세금 적용 전 제외**함. 단, 재분배 직불 계획이 작동하는 경우 회원국들은 상한선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음.
 - (2021-2027 CAP) 회원국들은 농기당 **6만 유로 이상**의 **직접지불금**에 대해 **상한선**을 적용하기 시작해 **10만 유로 이상**은 **지급할 수 없음**. **노임비용과 직·간접 노동 비용**은 **제외**하여야 함. 상한선 부과를 통해 **절약한 자원**은 **재분배와 농촌개발**에 **사용**함.
- **외부 수렴(External convergence)**
 - (2015-2020 CAP) **면적(헥타르)당 평균 지불금**이 **유럽연합 평균의 90% 이하**인 회원국들은 격차가 **2014년과 2019년** 사이의 **1/3 수준까지 줄어들도록 점진적으로 증가**시켜야 함. 반면 **평균 이상**의 **분배금**을 받는 **회원국**들은 그들의 **직불금**을 **하향 조정**해야 함.
 - (2021-2027 CAP) 유럽연합 평균의 **90% 이하** 수준의 지원을 받는 회원국들은 **2022년부터** 시작해 **점진적인 6단계 절차**를 통해 **격차**를 **절반 가까이 줄여야** 함. 또한 모든 회원국들은 수렴을 위한 **자원 조달**에 **기여**해야 함.
- **녹색화 조치(Greening Payment)**
 - (2015-2020 CAP) 농업인 보조금의 **30%**는 **환경 및 기후변화에 기여**할 목적으로 **특정 요구 사항 준수 여부**에 따라 **부과**할 수 있었음. 단, **유기농산물 생산자**들과 **소규모 농가**들은 녹색화 의무에서 **면제**함.

㉔ **아젠다 발굴**

- (2021-2027 CAP) 녹색화 규정은 중단함. 몇 가지 원칙들은 조건성(Conditionality) 개념으로 옮겨졌음. 다만 회원국들은 제1축 하에서 자발적 농업 환경기후 계획(voluntary agri-environment-climate scheme)을 제공해야 함.
- 상호의무준수(Cross-compliance)
 - (2015-2020 CAP) 상호준수의무는 1) 13가지 법적 관리 요건(SMR), 2) 우수 농업 및 환경 조건(GAEC)의 두 가지 범주로 구성되었음.
 - (2021-2027 CAP) 조건성(Conditionality) 개념으로 새롭게 교체했음. 농업인들은 소득 지원을 위해 1) 16개의 기후 환경, 공공 동식물 보건, 동물 복지 관련 법적관리요건들과 2) 10가지 우수 농업 및 환경 조건을 따라야 함. 회원국들은 국가 혹은 지역 수준에서 우수 농업 및 환경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야 함. 대만으로 의무 준수하지 않은 농업인들은 지원액의 3%를 벌금으로 지불함. 더 높은 수준의 페널티는 반복적 위반과 의도적 비준수에 적용함.
- 자발적 생산 연계 지원(Voluntary Coupled Aid (VCA) Scheme)
 - (2015-2020 CAP) 연계지원은 담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음. 원칙적으로 1축의 최대 13%가 배분될 수 있으며 단백질 작물에 대해 2% 추가 배분이 가능함.
 - (2021-2027 CAP) 회원국의 선택권은 대부분 지속됨. 비식품 바이오연료/바이오매스 작물을 위한 생산연계 보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추가적인 선택권이 주어짐.
- 청년 농업인 직불(Payments to Young Farmers)
 - (2015-2020 CAP)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들은 기본직불에 더하여 25% 추가 금액을 5년간 수령함. 제1축 금액의 2%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추가적 직불 대상 농지는 25~90헥타르 사이여야 함.
 - (2021-2027 CAP) 회원국들은 전략적 계획의 일환으로 청년농들을 위해 보충적 소득 지원을 할 수 있음. 회원국은 제1축 예산액의 적어도 2%를 청년 농업인 직불에 배분하여야 함. 제2축 영농정착지원금의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음. 그러나 청년농업인 지원 수단은 10만 유로까지 가능한 ‘설치 수당(installation allowance)’ 을 포함하여 제2축에서도 존재함.

㉔ **아젠다 발굴**

일본 농업·농촌 동향 국토교통성 드론 배송 실용화 실험

※ 일본농업신문의 「買い物や農産物集出荷 ドローン配送実証 過疎地で試験へ 国交省」(2018.7.17.)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였습니다.

□ **국토교통성 드론 배송 실용화 실험**

- 일본 국토교통성은 **산간지역과 섬** 등 물건을 구매하는 데 **어려움**이 있는 **지역**이나 **농산물 출하** 등에서 **드론을 활용한 배송 실용화**를 목표로 하고 있음.
 - 2018년도 내에 과소지역에서 실증사업을 통해 비행 루트나 드론 배송에 필요한 비용을 정리하여 **드론 배송 모델**을 확립할 계획이며, JA를 포함한 **물류사업자**나 **지자체**와 **연계**하여 진행할 예정임.
- **과소지역**에서는 저출산, 고령화나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으로 운반하는 물건들이 줄거나 운송트럭 적재량이 줄어 **수송 효율이 감소**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. 이에 국토교통성은 **소량 수송의 새로운 수단**으로 **드론**에 주목하였음.
 - 드론 배송을 활용하면 물건을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나 **운송 트럭 운전자 부족 문제 해결**이 가능하며, 기존의 차량 운송을 드론으로 대체하면서 **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**에도 **효과**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.
- 국토교통성에서는 **2017년도**에 **드론 전용 헬리포트 「드론포트」**의 **실증 실험**을 **나가노현(長野県)**에서 **실시**하였음.
 - **2018년도**에는 **나가노현**에서 지금까지 시험결과로 알아낸 헬리포트 조건 등을 활용하여 실제 현장에서 배송을 통해 **인원 체제나 기체 정비, 비용** 등의 **과제**를 **파악**하기 위한 **실증사업**에 나섰다.
 - 전국에서 **5곳 정도**를 **선정**하여 **실험**을 **진행**할 예정이며, 과소지역에서 배송을 하는 물류사업자나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대상으로 하여 7월 말까지 실험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음.
- **물류**를 시작으로 **재해 대응**이나 **농림수산업 분야** 등에서의 **드론 활용**에 대해 정부가 국민 회의에서 **체제에 관한 요건 및 환경정비** 등에 대해 **논의**를 **진행**하고 있음.
 - 물류 부분에서는 **2018년도**에는 **산간지역**이나 **섬** 등의 사람이 없는 곳에서, **2020년대** 전반에는 **도심** 등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도 보조자 없이 **드론 배송**을 **실용화**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.
 - 앞으로 과소지역 뿐만이 아닌 **전국**에서 **드론 배송**을 **활용**하여 **물류 문제**를 **해결**하고자 함.

㉔ **아젠다 발굴**

언론 동향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주요 동향

※ 아젠다 발굴을 위해 주요 일간지와 농업전문지에 기고된 내용을 근거로 농업·농촌 관련 쟁점 및 이슈, 주요 농정현안에 대응하고자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작성하였습니다.

□ **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주요 동향**

- 최근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 **배추와 무** 등 **채소** 가격이 **상승**, 아직까지 과일, 축산물 가격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있지만 **장기화**될 경우 **수급 불안정**에 따른 **가격 상승 우려**
 - 기상청은 **7월 말까지 고온현상**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폭염에 따른 피해는 더 커질 전망
 - 한편 전국에서는 **가축 폐사, 농작물 화상**을 입는 등 **피해가 속출**하고 있어 향후 **추석** 때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**가능성**도 제기
- **농식품부**, “최근 전국에 계속된 폭염으로 일부 농작물의 생육 장애, 가축 폐사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, 고온현상이 이달 말까지 계속되며 **농축산물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**” 고 밝혀
 - 이에 농식품부는 폭염 대비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(2018.7.23.)을 내놓으면서 **배추·무** 같은 **일부 채소가격**은 **상승**했지만, 아직까지 **그 외 품목은 영향이 제한적**이라고 언급
- [**폭염으로 원유 생산량 감소**] 한편, 폭염이 기승을 부린 **7월 초부터 전국 원유 생산량**이 평년 같은 기간보다 **10%가량 줄어든** 것으로 확인되었고 올해는 유난히 더워 **집유량이 평년 7-8월 대비 20%까지 감소할** 것으로 전망
 - 또한 **5년 만에 원유가격이 올라*** 당장의 가격 인상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폭염 장기화가 예고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농업계도 긴장
 - ※ 낙농협회와 유가공협회는 7.20일 원유기본가격조정협상위원회 회의를 열고 8.1일부터 원유 가격을 L당 926원으로 4원 인상키로 함.

자료: “떨떨끓는 폭염에 농산물 가격 비상” (머니투데이, 2018.7.23.), “땀통더위에 배추·무 등 채소 줄줄이 올랐다” (연합뉴스, 2018.7.23.), “폭염에 들쭉이는 밥상 물가… 추석까지 이어지나” (아주경제, 2018.7.23.), “농산물 가격 ‘비상’ …배추 28%·무 40% 인상” (KBS, 2018.7.24.), “폭염에 생산량 급감… ‘우유 대란’ 오나” (한국경제, 2018.7.24.), “폭염에 채소 직격탄…밥상물가도 ‘급등’ ” (SBS, 2018.7.25.), “열을 넘는 폭염…농·수·축산업도 ‘탈진’ ” (국민일보, 2018.7.25.)

통계·조사 2018년 보리, 마늘,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

자료 : 통계청(2018.7.20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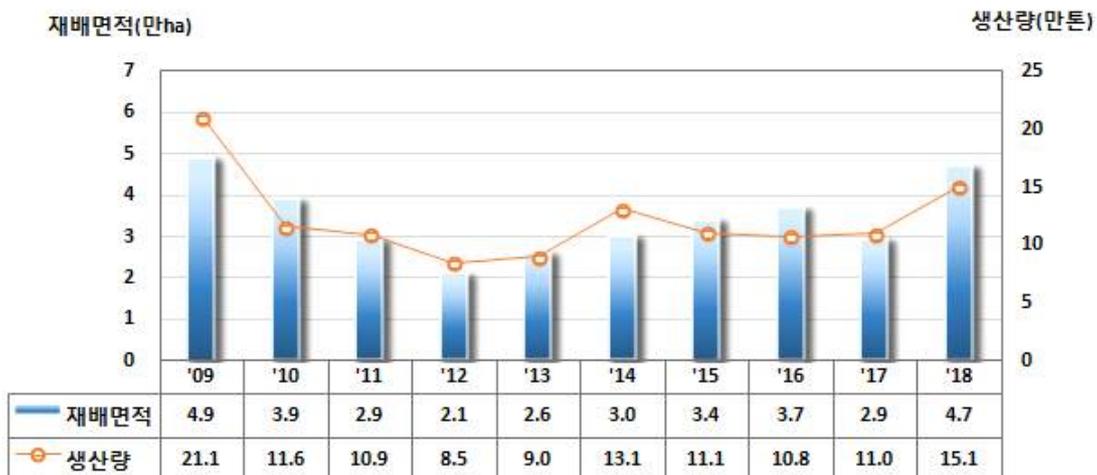
☐ 개요

- [통계청, 「2018년 보리, 마늘,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*」 발표, 7.20.] 농산물 수급 계획, 농산물 가격안정, 농업소득 추계 등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
 - ※ (조사대상 및 시기) 보리 552개, 마늘 532개, 양파 366개 / 보리: 수확 직후(6월 중순~7월 상순), 마늘·양파: 수확기(5월 중순~7월 상순)

☐ 주요 내용

- [보리 생산량 15만 1,401톤*, 전년 대비 4만 1,674톤(38.0%) 증가]
 - ※ (2016) 107,812톤 → (2017) 109,727 → (2018) 151,401
 - (원인) 이삭이 여무는 시기에 잦은 비로 인한 습해 피해 등으로 10a당 생산량은 감소하였으나 재배면적이 크게 늘어 생산량은 증가
 - (시·도별) 전남이 5만 9,962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39.6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어 전북 5만 9,112톤(39.0%), 경남 1만 8,530톤(12.2%) 순

▮ 연도별 보리 재배면적 및 생산량 ▮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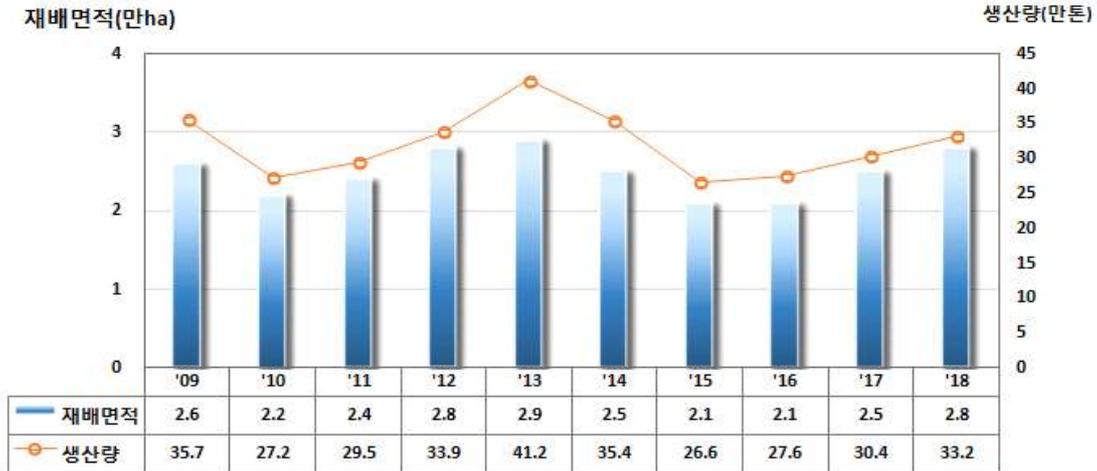


- [마늘 생산량 33만 1,741톤*, 전년 대비 2만 8,163톤(9.3%) 증가]
 - ※ (2016) 275,549톤 → (2017) 303,578 → (2018) 331,741

㉔ 통계·조사

- (원인) 초기 생육 시 **결주가 증가**하고, 알이 굵어지는 시기에 **젖은 비** 등으로 **10a당 생산량은 감소**하였으나, **재배면적이 늘어** 생산량은 증가
- (시·도별) **경북이 8만 4,952톤**으로 전체 생산량의 **25.6%**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어 **경남 7만 9,363톤(23.9%)**, **전남 6만 89톤(18.1%)**, **충남 4만 2,464톤(12.8%)** 순

▮ 연도별 마늘 재배면적 및 생산량 ▮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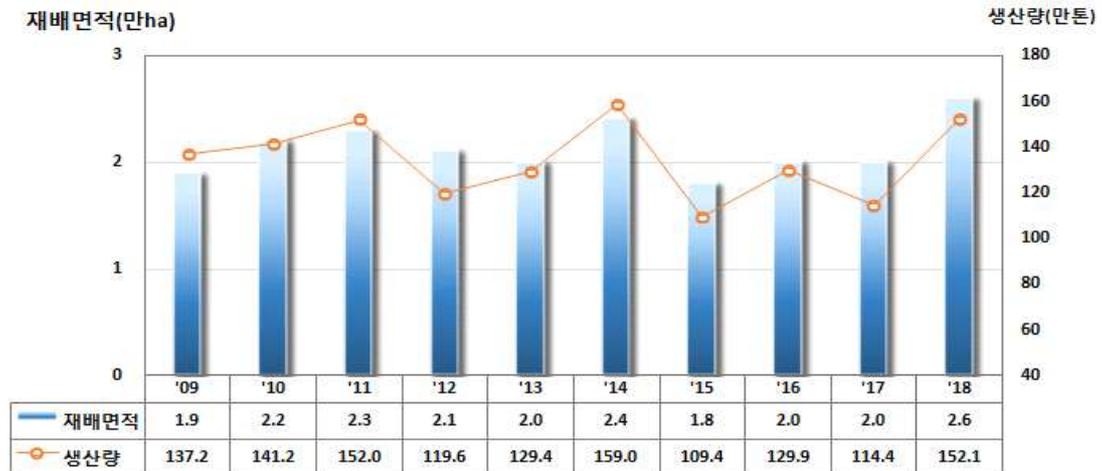


- [양파 생산량 152만 969톤*, 전년 대비 37만 6,476톤(32.9%) 증가

※ (2016) 1,298,749톤 → (2017) 1,144,493 → (2018) 1,520,969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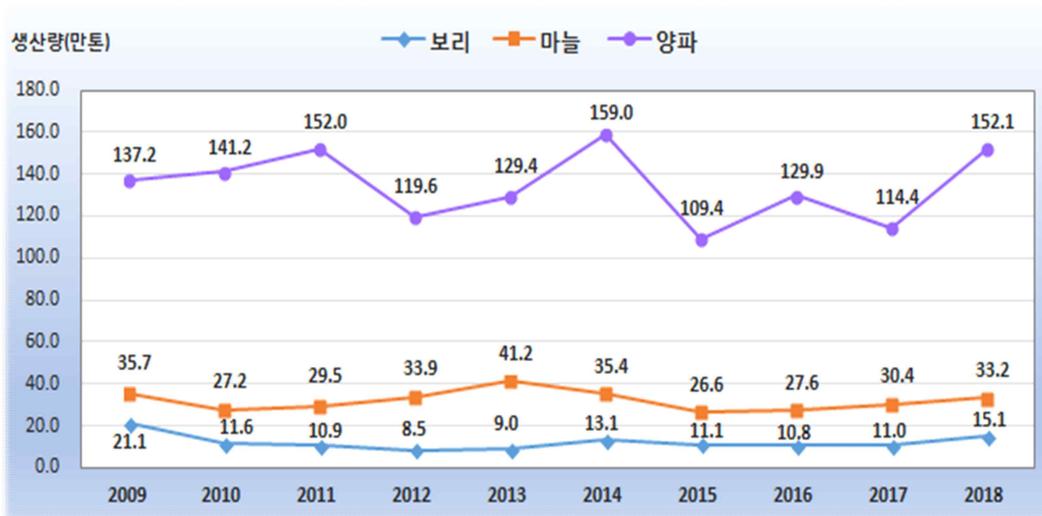
- (원인) 알이 굵어지는 시기에 **젖은 비**로 인한 **습해 피해** 등으로 **10a당 생산량은 감소**하였으나, **재배면적이 크게 늘어** 생산량은 증가
- (시·도별) **전남이 55만 8,659톤**으로 전체 생산량의 **36.7%**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이어 **경남 36만 1,120톤(23.7%)**, **경북 21만 2,066톤(13.9%)** 순

▮ 연도별 양파 재배면적 및 생산량 ▮



㉔ 통계·조사

■ 최근 10년간 보리, 마늘, 양파 생산량 ■



2017년 북한 경제성장을 추정 결과

자료 : 한국은행(2018.7.20.)

☐ 개요

- [한국은행, 「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*」 발표, 7.20.] 북한의 경제력을 우리의 경제시각에서 비교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대북정책에 활용할 목적으로 추진

※ 경제성장률, 산업구조, 경제규모(명목 GNI), 1인당 GNI 등 국민계정과 관련된 지표는 우리나라의 가격,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함에 따라 이들 지표를 여타 나라들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.

☐ 주요 내용

- [2017년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(GDP)] 전년 대비 3.5%↓*, 전년 중 큰 폭 증가했던 광업, 제조업, 전기가스수도업 등이 감소로 전환

※ 1997년 -6.5% 이후 최저치

■ 북한의 경제성장률 추이(단위: 전년 대비 증감률, %)

1990	1995	2000	2005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
-4.3	-4.4	0.4	3.8	-0.5	0.8	1.3	1.1	1.0	-1.1	3.9	-3.5
(9.8)	(9.6)	(8.9)	(3.9)	(6.5)	(3.7)	(2.3)	(2.9)	(3.3)	(2.8)	(2.9)	(3.1)

주: () 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

■ 북한의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(단위: 한국 십억 원, %)

구분	실질		증감률	명목		구성비 (2017)
	2016	2017		2016	2017	
농림어업	7,144.1	7,049.4	-1.3	7,832.6	8,304.5	22.8
광 공 업	11,428.7	10,462.0	-8.5	11,980.1	11,573.2	31.8
광 업	4,790.4	4,265.5	-11.0	4,547.4	4,271.4	11.7
제조업	6,657.9	6,196.6	-6.9	7,432.7	7,301.8	20.1
전기가스수도업	1,192.5	1,157.3	-2.9	1,874.5	1,836.5	5.0
건 설 업	2,608.7	2,494.0	-4.4	3,194.7	3,146.8	8.6
서비스업	9,561.6	9,608.8	0.5	11,221.4	11,520.7	31.7
정 부	6,904.4	6,958.4	0.8	8,098.4	8,446.8	23.2
기 타	2,657.1	2,650.3	-0.3	3,122.9	3,074.0	8.4
(도소매및음식숙박)	127.5	125.8	-1.3	134.7	136.0	0.4
(운수및통신)	762.8	730.9	-4.2	915.4	838.2	2.3
(금융보험 및 부동산)	1,767.9	1,795.3	1.5	2,072.8	2,099.8	5.8
국내총생산	31,996.6	30,882.3	-3.5	36,103.3	36,381.8	100.0

㉔ 통계·조사

- [2017년 북한 산업구조] 2017년 중 광공업, 건설업, 전기가스수도업 비중(명목GDP 대비)이 전년에 비해 하락하였으나 **농림어업***, 서비스업 비중은 **상승**

※ 농림어업은 22.8%로 전년 대비 1.1%p 상승

■ 북한의 산업별 성장률(단위: %) ■

구분	북한			한국	
	2015	2016	2017	2016	2017
농림어업	-0.8	2.5	-1.3	-2.8	0.3
광 공 업	-3.1	6.2	-8.5	2.4	4.3
광 업	-2.6	8.4	-11.0	1.8	-4.1
제 조 업	-3.4	4.8	-6.9	2.4	4.4
(경 공 업)	(-0.8)	(1.1)	(0.1)	(1.8)	(1.9)
(중화학공업)	(-4.6)	(6.7)	(-10.4)	(2.5)	(4.9)
전기가스수도업	-12.7	22.3	-2.9	2.7	3.1
건 설 업	4.8	1.2	-4.4	10.1	7.1
서비스업	0.8	0.6	0.5	2.5	2.1
(정 부)	(0.8)	(0.6)	(0.8)	(2.3)	(2.5)
(기 타 ¹⁾)	(0.6)	(0.5)	(-0.3)	(2.5)	(2.0)
국내총생산	-1.1	3.9	-3.5	2.9	3.1

주: 1) 도소매 및 음식숙박, 운수 및 통신, 금융보험 및 부동산 등을 포함

■ 북한의 산업구조¹⁾(단위: %) ■

구분	북한			한국	
	2015	2016	2017	2016	2017
농림어업	21.6	21.7	22.8	2.1	2.2
광 공 업	32.7	33.2	31.8	29.7	30.6
광 업	12.2	12.6	11.7	0.2	0.2
제 조 업	20.4	20.6	20.1	29.5	30.4
(경 공 업)	(7.0)	(6.9)	(6.8)	(5.5)	(5.1)
(중화학공업)	(13.4)	(13.7)	(13.3)	(24.0)	(25.3)
전기가스수도업	4.5	5.2	5.0	3.3	3.0
건 설 업	9.0	8.8	8.6	5.7	5.9
서비스업	32.2	31.1	31.7	59.2	58.3
(정 부)	(23.3)	(22.4)	(23.2)	(10.8)	(10.9)
(기 타 ²⁾)	(8.9)	(8.7)	(8.4)	(48.4)	(47.3)
국내총생산	100.0	100.0	100.0	100.0	100.0

주: 1)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각 산업별 생산액의 비중

2) 도소매 및 음식숙박, 운수 및 통신, 금융보험 및 부동산 등을 포함

㉔ 통계·조사

- [2017년 북한 국민총소득(명목GNI)] 36.6조 원, 한국의 1/47(2.1%) 수준
- [2017년 북한 1인당 국민총소득(GNI)] 146.4만 원, 한국의 1/23(4.4%) 수준

■ 북한의 경제규모 및 1인당 GNI ■

구분	북한 (A)		한국 (B)		B/A (배)	
	2016	2017	2016	2017	2016	2017
명목GNI(한국 조 원)	36.4 (5.4)	36.6 (0.7)	1,646.2 (5.0)	1,730.5 (5.1)	45.3	47.2
1인당GNI(한국 만 원)	146.1	146.4	3,212.4	3,363.6	22.0	23.0
인구(천 명)	24,897	25,014	51,246	51,446	2.1	2.1

주: ()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(%)

- [2017년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 55.5억 달러(남북교역 제외), 전년(65.3억 달러) 대비 15.0%↓
 - (수출) 17.7억 달러, 전년 대비 37.2%↓, 광물성생산물(-55.7%), 섬유제품(-22.2%), 동물성생산물(-16.1%) 등이 감소
 - (수입) 37.8억 달러, 전년 대비 1.8%↑, 광물성생산물(-9.0%)은 줄었으나 화학공업제품(10.6%), 섬유제품(5.4%) 등이 증가

■ 북한의 대외 교역규모(남북교역 제외)(단위: 억 달러) ■

구분	북한 (A)		한국 (B)		B/A (배)	
	2016	2017	2016	2017	2016	2017
교역규모	65.3 (4.5)	55.5 (-15.0)	9,016.2 (-6.4)	10,521.7 (16.7)	138.1	189.6
수 출	28.2 (4.6)	17.7 (-37.2)	4,954.3 (-5.9)	5,736.9 (15.8)	175.7	324.1
수 입	37.1 (4.4)	37.8 (1.8)	4,061.9 (-6.9)	4,784.8 (17.8)	109.5	126.6

주: () 내는 전년 대비 증감률(%)

자료: 코트라(KOTRA), 관세청

EU 집행위원회, 2018년도 혁신역량평가 결과

자료 : 기획재정부(2018.7.20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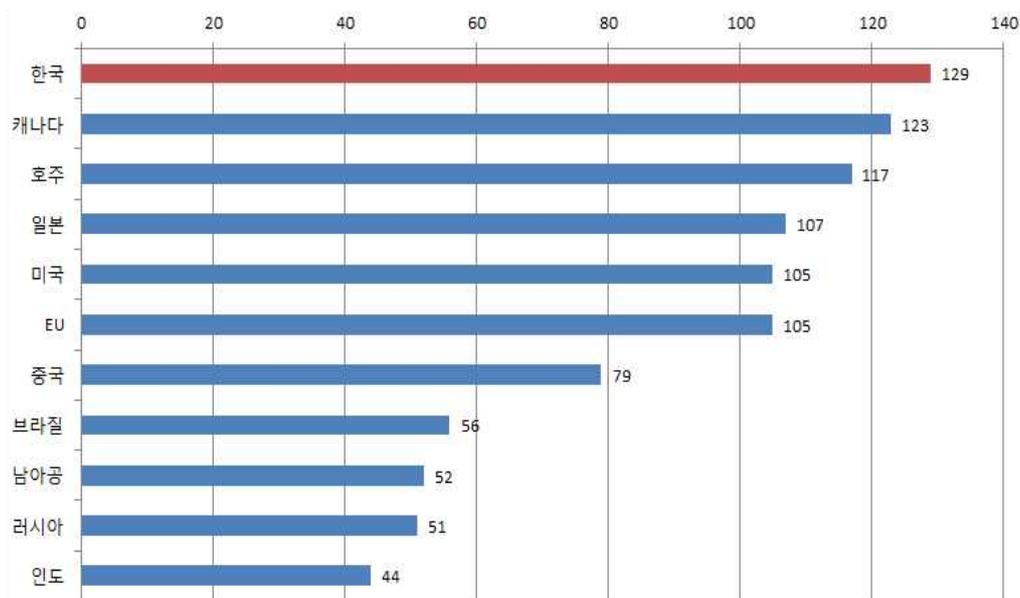
☐ 개요

- [EU 집행위원회, ‘2018년도 혁신역량평가*’ 발표, 6.28.] EU 집행위원회는 6월 28일 ‘2018년도 혁신역량평가’를 발표하였으며, 평가결과 한국은 **종합혁신지수** 129.2점**으로 **전체 1위**를 기록, 캐나다(122.5), 호주(116.9), 일본(107.4), 미국(105.2)순

※ 2018 EIS(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): 혁신에 대한 EU회원국 간 상대적 평가결과를 제공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도구로서 2001년부터 매년 실시, EU 회원국(28개국)과 EU 인근국가(8개국), 글로벌 경쟁국(10개국: 한국, 미국, 캐나다, 호주, 일본, 중국, 브라질, 인도, 남아공, 러시아)을 비교

※※ 종합혁신지수: 혁신여건·투자·혁신활동·파급효과 4개 분야, 10개 부문에 대해 총 27개의 세부지표를 활용, 2010년 EU의 평균혁신지수를 100으로 가정하여 상대비교, 국가별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항목별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 생성

■ 글로벌 경쟁국의 EU 대비 혁신수준 ■



☐ 평가 결과

- 우리나라는 직접 비교가 가능한 16개 평가지표 중 **10개 지표**에서 EU 회원국 평균보다 **뛰어난 것으로 파악**

㉔ 통계·조사

- 특히 ‘**민간부문의 R&D투자**’ (241.1), ‘**상표권**’ (233.3), ‘**디자인권**’ (229.9) 측면에서 한국의 위치는 **선도적인** 반면, ‘**혁신주체 간 협력**’ (21.4), ‘**지식집약 서비스의 수출**’ (44.8) 등은 상대적으로 **뒤쳐진** 것으로 나타남

▮ EU(회원국 평균) 대비 한국의 혁신수준, 2018년 ▮

EU 대비	지표	2010년	2018년
우위	고등교육을 이수한 25~34세 인구 비중	143.9	143.2
	인구 백만 명 당 국제 과학 분야 공동 논문	106.5	104.6
	GDP 대비 공공분야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	117.9	129.8
	GDP 대비 기업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	231.1	240.1
	인구 백만 명 당 공공-민간 공동 논문	143.6	156.4
	GDP 대비 민간의 공공분야 연구개발 지출 비중	117.8	131.8
	GDP 10억 유로 당 PCT 특허 출원	129.6	161.7
	GDP 10억 유로 당 상표권 출원	238.4	233.3
	GDP 10억 유로 당 디자인권 출원	215.3	229.9
	중간재 및 첨단기술 제품의 무역수지 기여도	117.8	119.8
열위	25~34세 인구 천 명 당 신규 박사 학위자	73.5	83.8
	국가의 전체 과학 논문 중 전 세계 상위 10% 이상 인용된 과학 논문 비중	63.6	62.5
	중소기업 중 제품 및 공정 혁신기업 비중	104.4	96.4
	마케팅 또는 조직 혁신을 갖춘 중소기업 비중	34.7	84.8
	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혁신적 중소기업 비중	131.9	21.4
	전체 서비스수출 중 지식 집약 서비스 수출 비중	91.6	44.8
종합			129

주: EU 국가를 100으로 할 때 한국 수준

- 2010년과 비교하여 혁신역량이 개선된 지표들(16개 중 9개)도 있지만 오히려 **악화된 지표들도 존재(7개)**
 - ‘**마케팅 또는 조직혁신을 갖춘 중소기업 비중**’ 에서 가장 큰 폭으로 **개선**(34.7 → 84.8, +50.1)된 반면, ‘**다른 주체와 협력하는 중소기업 비중**’ 은 가장 크게 **악화**(131.9 → 21.4, △110.5)
- 보고서는 단기적(2년)으로 우리나라의 종합혁신지수는 상승하겠지만(+1.1), 상승폭이 EU(+1.9)에 비해 낮아 향후 EU와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

본 자료는 농업 유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와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주간 단위로 수집한 정보를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. 자료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으나 자료 활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